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0-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3월 셋째 주 정세동향

2010년 3월 18일 목요일

<차례>

● 세계경제

1. 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효과
 - 향후 전망
2. 대마불사를 둘러싼 논의들
 - 대마불사와 관련된 주요 논점
 - 대마불사 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

● 국제정세

- 특이사항 없음

● 국내경제

1. 최근 국내경기의 제약요인과 정책과제
 - 국내 경기 제약 요인
 - 정책과제
2.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 영국의 가계부채 급증과 경제 불안 현상
 - 국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시사점
3.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

● 국내정세

1. 5+4협회의 전과정과 주요쟁점
 - 시기별 흐름
 - 주요 쟁점별 정리

● 노동

1. 총연맹
 - 민주노총 2010년 사업계획 확정
 - 민주노총 임원 현장 순회 및 지방선거 대응
2. 금속
 - 한진중공업 울산공장, 전 직원 전환배치 추진
 - 현재자동차 전주공장 위원회의 정규/비정규 연대투쟁
 - 금속노조 경주지역본부의 지역전면연대파업

- 캐리어 에리컨 지회, 광주노동청 앞 농성투쟁

3. 공공

- 공무원 노조 출범식 강행

4. 기타

- 새희망노동연대 출범

● 여성

1. 낙태 관련

- 보건복지부

- 국회토론회 “낙태, 합법적 허용범위는?”

- 일다 ‘낙태죄 폐지할 시기에 한국에서는 고발이라니...’

- 프로라이프 의사회

■ 세계경제

1.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효과

출처: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10-9호 / 2010. 2. 21~2. 27

- 중국효과(China Effect)란 중국의 고도성장, 생산기지로서의 적합성 등이 주변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아시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현상을 지칭. 중국효과는 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FDI)와 ②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교역 확대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

- FDI를 통한 중국시장으로의 진출: 값싼 노동력과 방대한 현지시장을 겨냥하여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등 선진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직접투자(FDI)를 확대. 다만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은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고용부진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다소 불투명.

- 교역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 중국의 수출증가,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의존형 성장을 추구하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세가 확대. 중국의 내수가 확대될 때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간 분업체계에 힘입어 중국의 최종재 수출이 늘어날 때도 주변국의 對중국 수출이 함께 증가.

1) 향후 전망

- 지금까지는 중국의 수출이 늘면 아시아국가의 對중국 수출도 함께 늘어난 반면(수출경로의 활성화) 중국 내수 확대는 對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내수경로의 침체) 앞으로 이러한 관계가 변화될 가능성.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규제(2004년부터 에너지 과다소비 및 환경오염 품목의 가공무역을 금지) 등으로 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이 이전처럼 활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을 통한 간접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 오던 FDI도 중국정부의 우대조치 축소,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이전만큼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중국은 그간의 외투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내자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실제로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의 이전이 미미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 이후 우대 세제의 폐지, 노동관련 규제 강화, 반독점 및 M&A 규제 강화, 투자 선별화 정책 등을 시행.

- 최근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위주의 성장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정책중점이 내수확대에 두어질 전망. 다만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개인신용의 가용성 확대 등 중국경제 전반의 구조변화를 요구하므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중국정부의 계획대로 내수시장이 확대되더라도 2020년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미국의 27% 정도에 불과해. 중국시장이 서방선진국 시장을 완전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에 관한 주요 논점

* 출처: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10-9호 / 2010. 2. 21~2. 27

- 현재 미국 의회는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 금융개혁법안을 마련하는 중. 지난해 12.11일 미 하원에서 의결된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 법안」 과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대형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와 관련된 감독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위험에 처할 때 신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시스템리스크의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부문의 영업 제한, 자산규모 축소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 구제금융 재원은 대형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펀드 형태로 조성하거나 사후에 이들 금융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조달.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등 시스템리스크 감독기능을 담당할 감독기구를 신설하거나 미 연준에 동 기능을 부여.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 1.21일 대규모 은행에 대해 영업규모와 업무범위를 직접 제한하는 금융규제안(일명 "Volcker's rule")을 발표.
-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월가 및 공화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학계, 민주당 및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공화당 의원들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상원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국면 전환시도라며 비판. 월가는 은행들의 수익성 저하, 가계 및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등을 근거로 반발하면서 Volcker's rule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로비를 전개. 학계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심각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라며 지지. 일반 국민들도 구제금융을 수혜한 대형 금융회사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데 대한 반발심리 등이 작용하여 금융규제 강화방안에 찬성하는 입장.

1) 대마불사와 관련된 주요 논점

- 대형화와 효율성: 금융회사의 대형화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중복설비 제거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시장지배력이나 집중도 심화로 X-비효율성이 상승할 위험도 동시에 내포. (X-비효율은 경쟁 유인 약화 등으로 기업조직 내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총칭.) 시장지배력 강화 등으로 비경쟁적 환경이 조성되면 대출금리나 수수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후생수준이 감소되는 결과 초래. 미국과 유럽의 은행합병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은행의 대형화가 효율성 제고와 후생증가에 기여했는지에 일치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과 구제금융: 최근의 경험에서 보듯이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은 다른 금융회사의 파산을 유발하거나 자본시장의 마비를 가져와 금융 및 실물경제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 금융회사의 규모 및 자산 집중도가 커지고 금융상품 및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금융회사 파산의 충격은 확대. 대형 금융회사 파산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정책당국자가 구제금융을 실시할 경우 금융의 위험추구경향을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 구제금융 실시로 금융시장이 안정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도덕적 해이 유발에 따른 비용 중 어느 것이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Gary H. Stern, 전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 한편 정책당국자들은 구제금융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 우려시 구제금융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았던 것이 과거의 경험. 이는 금융회사간의 거래관계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금융회사 파산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초래할 수 있는 전이효과(spill-overs)의 크기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데 기인.
- 구제금융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재정건전성 악화: 최근과 같이 금융회사 규모가 커진 데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금융회사간 거래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구제금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 동 재원은 정부의 재정자금이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구제금융은 필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

2) 대마불사 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

- 대마불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규모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
- 정책당국자가 주요 금융회사의 파산시 초래될 부정적 영향의 강도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정보부재에 따른 지나친 불안감 등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시스템리스크 감독제도를 개혁. 제도개혁은 금융회사의 파산시 투자자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금융혁신 및 규제회피 행위 등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대마불사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대형화 속도를 제한.
- 구체적 실행방안 ①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등 사전 조치: 모니터링 결과 특정 금융회사의 파산 위험이 높고 이것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순자산이 플러스 상태이거나 손실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강력한 사전조치

(부실자산 정리, 회사분할 등)를 취하여 문제 발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 즉 부실자산정리 명령의 기준으로 현재의 손실상 태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도 고려. ② 금융회사의 규모 제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및 유동 성 기준, 레버리지 수준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 대형 금융회사로서 영업활동을 계속하려면 유사시 발생할 사회적 비용 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험금 형태로 구제금융 펀드에 출연토록 의무화. 이러한 조치들이 금융회사가 대마불사 때 문에 누리는 암묵적 혜택보다 비용부담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간접적으로 금융회사의 규모 확대를 조절하는 효과. 금 융회사의 규모를 직접 제한하는 것도 대안도 존재. 다만 대형 금융회사를 규모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민주당 Brad Sherman 의원은 개별 금융회사의 파산에 따른 GDP 감소 효과가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의 규모를 제한할 것을 주 장. 일부에서는 개별 은행의 부채규모가 GDP(2009년 현재 14.3조달러)의 10%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제안), 자국 금융회사의 경 쟁력 약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파산한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금융회사에는 어떤 예외를 둘 것인지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

■ 국제정세

특이사항 없음

■ 한국경제

1. 최근 국내 경기의 제약 요인과 정책 과제(현대경제연구원, 3/15)

1) 국내 경기 제약 요인

-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 흐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5대 제약 요인이 존재함

① 소비 회복세 둔화: 소비 회복세가 올해 들어 크게 약화됨

- 고용 회복 지체, 가계 부채 증가, 노후차 세지 지원 종료 등으로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 소매판매액이 전년동월 대비 11월 9.7%, 12월 12.7에서 1월 6.9%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됨.
- 특히, 전기대비 11월 0.5%, 12월 1.2%,에서 1월 -1.3%로 감소세로 전환됨.

② 서비스 수지 적자 급증: 올해 들어 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큼

*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

- 서비스 수지 적자는 올 1월 21억 6천만 달러로 2009년 1월 7억 1천만 달러 적자의 3배를 초과함.
- 2009년 10월~2010년 1월 기간 중 서비스 수지 적자는 79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동기의 21억 5천만 달러의 3배를 훨씬 상회함.
- 한편 서비스 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는 2010년 1월에 4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③ 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속: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금리의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출구전략 추진 을 어렵게 함

- 원/달러 환율이 2월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3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됨.
- 원/달러 환율이 3월 9일 1,134원을 기록하며 2월 8일 최고점 1,171원 대비 3.2% 절상됨.
-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유입이 원화 가치 추가 절상 요인으로 작용할뿐만 아니라 대외여건 악화 시 외환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AA-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BBB-등급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회사채 금리 신용스프레드는 신용등급별 회사채와 국고채와의 금리 차이를 의미함

- BBB-등급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확대는 기업의 신용경색을 심화시켜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출구전략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④ 고용회복 지연: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 공공 일자리 대책의 축소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증가세로 전환되지 않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세가 감소하여 2010년 1월 신규 취업자 수는 0.5만 명에 그침.

- 민간부문의 신규취업자 수는 11월 -32.8만 명, 12월 -16.7만 명, 1월 -1.1만 명으로 여전히 감소세를 보임.

- 공공부문의 신규취업자 수는 11월 31.8만 명, 12월 15.1만 명, 1월 1.5만 명으로 크게 축소됨.

-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미약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경우,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25만 명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음.

⑤ 소득 빈곤층 증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경기 양극화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여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음

- 경기 양극화로 소득 5분위 가계의 흑자액이 전년에 비해 3.3% 감소한 반면, 1분위 적자액은 10.6% 확대됨.

- 그 결과 2009년 2인 이상 도시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비율은 4.94배로 2008년 4.87배에 비해 증가함.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빈곤율로 2009년 13.1%로 2008년 12.5% 대비 증가함.

2) 정책과제

- 소비 심리 안정화: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의 급속한 증가를 방지하고 자산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

-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

- 금융시장 불안정 해소: 원화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정책금리와의 괴리가 큰 대출금리의 하향 조정을 추진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민간의 일자리 창출 추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

- 빈곤층 대책반 가동: 국가고용전략회의 내 빈곤층 대책반을 가동하여 빈곤층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

2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현대경제연구원, 2/26)

1) 영국의 가계부채 급증과 경제 불안 현상

- 영국의 가계부채는 2000년대 이후 주택경기 호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모기지대출) 증가에 기인하여 현재 주요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영국 가계부채 급증의 배경은 첫째, 저금리 기조임. 영국중앙은행 역시 2000년 이후의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동참하면서 가계의 차입여력을 확대시킴. 둘째, 주택가격 상승임.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 현상 속에서 영국의 주택가격도 급등하면서 가계들의 매매차익을 기대한 주택모기지대출이 크게 증가함. 셋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임. 주택자금의 공급하는 영국의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모기지 상품 개발을 통해 공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시킴. 넷째, 신용대출의 증가임. 영국 가계들은 2000년대 들어서 과소비로, 2006년 하반기부터는 생계형 지출로 신용대출이 꾸준히 늘어남.

- 영국 가계부채 급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전까지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가격 급락, 은행 건전성 악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맞은 이후 가계의 원리금부담에 따른 소비능력 약화, 개인파산 급증, 신용경색 현상 심화에 직면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영국의 경기회복은 2009년 3/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주요 국가와는 달리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최근에는 영국 경제 위기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음.

2) 국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시사점

- 국내 가계부채도 2000년 이후 영국과 매우 유사한 배경으로 급증하고 있어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첫째,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 국가의 가계부채 감소 상황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2009년

2/4~4/4분기 동안 약 50조 원이 증가함. 둘째, 가계 능력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큼. 한국의 개인총가처분소득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은 150%로 170%대인 영국의 바로 다음을 기록하고 있음.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 즉 이자 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등)을 보탠 것으로서,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금순환표상 금융부채/자산 비율의 경우는 45%로 일본 20%대 초반, 미국 30% 수준, 영국 35% 수준보다 월등히 높음. 셋째,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함. 주택담보대출을 차입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15% 수준으로 미국의 13% 수준에 비해 높음. 넷째, 가계부채 의 실물자산 담보비중이 높음. 대부분의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칫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실물자산이 유동화되지 못할 경우 가계부채 해결이 어려움. 다섯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유난히 큼. 소득분위별 1분위의 경우 자산이 없는데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320%로 이는 4분위, 5분위의 12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음.

3.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새사연, 3/15)

-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 불평등 현상과도 연계되어 있음. 즉 '부동산버블에 의한 가계부채'와 '양극화에 의한 가계부채'라는 두 층위의 가계부채 문제가 혼재되어 있음. 물론 가계부채의 규모와 상승률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동산버블임. 그러나 임금상승률 저하와 양극화 확대에 따라 사회적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난 가계부채 또한 적지 않은 수준임. 따라서 가계부채가 두 층위에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 그 관리 및 처방 또한 수준을 달리하여 접근해야 함.
- 부동산버블 또한 자산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가계부채를 상승시키는 두 요인은 '양극화'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음. 즉 사회적 자원, 자산, 그리고 소득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버블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며, 이는 또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유력한 방안이기도 함.
- 한국의 가계부채의 레버리지 비율은 1998년 84.7%에서 2008년 150.2%로 지난 10년 동안 65.5%p나 증가하였음. 동 기간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319조 원에서 573조 원로 80% 증가하는데 그침. 이에 비해 가계부채는 270조 원에서 861조 원으로 무려 218%p나 급증하였음. 이는 미국의 42%p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OECD 선진 16개국과 비교하면 아일랜드(85%p), 네덜란드(82%p), 덴마크(69%p)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레버리지 비율 150.2% 또한 네 번째를 기록하고 있음.
- 한편 1998년 말(=100)을 기준으로 전국의 실질 주택 가격은 39.1% 증가하였음. 이는 아일랜드(172%), 영국(146%), 스페인(117%)은 물론이거니와, 미국(50%)보다도 낮은 수치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버블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 그러나 동 기간(1998~2008), 서울지역은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기준으로도 84%나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높은 상승률임.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동 기간 139% 상승하였고, 특히 강남지역은 무려 169%나 상승하였음. 서울 강남의 부동산버블은 거의 국가부도 사태에 내몰려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아일랜드(172%)에 육박할 만큼 높은 수치임.
-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까닭은, 지난 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데 있음. 지난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정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913.2조 원으로 전년 대비 6.3%나 증가하였음. 따라서 국민소득 기준으로 개인 가처분소득(2008년 말=573.1조 원)이 대략 1~2%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2009년 말 기준 가계의 레버리지 비율은 대략 156~158%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됨.

* 약평

-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음. 부동산 거품 문제와 연동되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뇌관임. 대외 충격이 없을 때 이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 가능하겠으나, 심각한 대외 충격(더블딥)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에서 비롯된 위기가 금융부문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2007~2009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음(특히 주식가격 하락과 비교하면). 부동산 거품의 경우 수도권, 그 중에서도 강남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음(「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3/9). 한편 소득양극화 문제도 동시에 지적되고 있음. 소득양극화 극복을 위해 정부나 자본은 맞춤형 빈곤층 지원 대책(또는 잔여적 복지)을 주문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와 연구소는 내수 진작과 빈곤층 지원의 확대, 일부 단체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음.

■ 한국정세

1. 5+4 협상의 전 과정과 주요 쟁점(정종권)

1) 시기별 흐름

가) 사전 교류 : 12월 ~ 1월 12일까지

- 2009년 12월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아5당 실무 책임자급 초청 몇 차례 비공식 비공개 간담회 진행. 2010년 아5당 대표들의 공식 회동 여부에 대한 실무적 논의 진행. 1월 12일 시민사회 원로들과 아5당의 대표들이 원로들의 초청에 의한 간담회에서 "2010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의견 발표 후 협의모임 1월 말까지 진행

나) 1단계 협의 : ~ 2월 10일 1차 실무협의까지

- 1월 13일부터 2월 8일까지 9차례의 '공동대응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비공개 실무협의 진행. 진보신당은 '공동의 선거 정치 강령' 합의와 후보연합 방식 논의 제기하며 초안으로 9대 과제와 풀뿌리 6대과제 제출. 실무협의 과정에서 진보신당(공동 정치 강령 주장)vs민주당(연합공천 주장)이 쟁점이 되었고 공식기구 전환 논의가 진행. 민주당은 쟁점적 의제 배제, 경쟁력 우위 후보 사전 결정 주장. 진보신당은 이에 반발.

- 논의 끝에 2월 10일 정치협상의 성격을 명확히 한 '아5당 협상회의'로 논의를 지속하고, 정치강령-정책연합 이견 축소, 광역단체장 독점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무합의문 발표

다) 2단계 협의 : ~ 3월 4일 중간합의문 발표까지

- 2월 16일-3월 2일까지 여섯차례의 협상회의 진행. 별도로 정책연합(정치강령)을 다루는 소위원회(정책연합위원회) 논의 진행. 소위에서 진보신당은 '공동정책강령에 대한 진보신당의 10대 과제'라는 안을 제출. 협상회의에서는 후보연합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룸.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은 대부분 민주당 후보로, 기초단체장의 일부는 아4당에게 배려하겠다는 입장, 진보신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호혜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5당의 연합후보가 되어야 함을 주장. 나머지 아3당, 4개 시민단체들은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임.

- 3월 2일 광역단체장 민주당 독점을 대체로 인정, 나머지를 아4당이 나눠먹는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준비한 중간합의서 초안에 진보신당을 제외한 4+4는 동의함. 3월 3일 이에 반대하는 진보신당의 안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3월 4일 중간합의문 발표. 하지만 이후 휴지조각이 됨.

라) 그 이후

- 3월 14일과 15일 진보신당은 3월 4일 중간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광역단체장에 대한 선 정치협상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배분 논의에 대해 불참의사를 밝히고 3월 15일 논의에서 퇴장함. 3월 16일 4+4회의를 진행하고 잠정 합의안을 만들고 동의 정차를 거쳤고,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고 5+4가 무산되었다는 입장을 밝힘.

2) 주요 쟁점별 정리

가) 1차 협의에서 제출한 정책연합(정치강령)

- 비정규직, 사회복지세, 환경세, 노동3권, 한미FTA,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의 의제에 대해서 진보신당이 논의를 선도했으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다른 정책연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후속 논의를 회피하거나 축소시키려는 입장을 견지함.

1. 정책연합 쟁점 도표 정리

	민주당	진보신당	야3당
의제	지방행정의회제로 제한하고 쟁점의제는 이후 과제로 남기자는 입장	주요 정치의제를 포함하는 공동강령이 되어야 함	*민노: 주요정치의회제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 쟁점이 선거연합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됨 *참여: 한미FTA등은 지방선거의 정책의제가 아님
일정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자체에 소극적	선거연합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함	논의를 지속하되, 선거연합의 핵심 결립들이 안되도록
주요 의제	한미FTA, 노동3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구체화하지 않음	비정규, 노동3권, 한미FTA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제시	*민노: 진보신당과 의견은 비슷하나 쟁점화는 회피함 *참여: 정치개혁의제는 진보와 비슷하나, 한미FTA 등은 전혀 다름
처리 방식	지방공동정부 이후의 지속적 협의과제로 하자	선차적 해결의 강조	모호한 태도

나) 후보연합

- 후보연합의 핵심은 종합경쟁력을 기준으로 후보 확정 이전에 정당을 우선 결정하지는 민주당의 연합공천 방안에 대한 쟁점이 있음. 진보신당은 이것은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대해 민주당 후보가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반대하고, 후보연합은 정치협상을 통해 일정한 기준과 근거(ex> 정당 지지율)를 가지고 모든 선거구에 연합군(연합후보)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
- 야3당은 민주당으로의 후보결정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나머지 선거에서는 정당지지율 등을 근거로 한 정치협상과 정치적 배분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 진보신당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으나 이러한 논의 지형에 변화가 없자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퇴장. 더욱이 정책연합위원회에서는 정책연합의 쟁점의제들에 대해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5+4의 최종합의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2. 후보연합 쟁점 도표 정리

	민주당	진보신당	야3당
연합 기준	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연합	정치적 협의를 통한 연합	광역단체장과 다른 선거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
선거 별 연합 관성	광역단체장에서의 민주당 우선권을 인정한다면 그 외 선거에서의 양보 가능	각 선거단위별 연합 모색	광역에서는 민주당 우선권 인정, 그 외 선거단위에서는 일정한 지분 요구
광역 단체장	민주당으로의 단일화 합의 혹은 형식적 경선을 통한 민주당으로 단일화 주장	연합군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야4당의 정치적 분할 필요	실제적으로 민주당 주장 수용
기초 단체장 등	최소비율로 야4당에게 지분을 양보할 수 있음	위와 동일	정치적 협의를 통한 분할을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 지지
정리 방식	시민사회 중재라는 형식을 거쳐 당들이 수용하는 방식	정당들의 책임있는 협의와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시민사회 중재라는 형식을 거쳐 당들이 수용하는 방식
호남 문제	필요하다면 호남예외론 인정 (*호남예외론은 민주당의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	호남예외론 불인정	민노: 호남예외론 불인정 참여: 호남예외론 인정

- 일부 언론의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음. 진보신당은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단 한번도 서울시 혹은 경기도 후보를 양보해 달라고 주장한 적 없고, 야5당의 연합군을 형성하려면 모든 선거에 후보연합에서 각 당 후보가 골고루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광역단체장을 모두 양보해도 수도권 3곳, 호남권 3곳 중 각각 1곳씩 (진보신당이 아니더라도)야4당의 후보가 나갈 때 진정한 야5당 선거연합이라 할 수 있음.

■ 노동

1. 총연맹

1) 민주노총 2010년 사업계획 확정

- 민주노총은 5일 중앙위를 통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고 각종 안건들의 심의.
-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규약 중 일부 개정안 심의 건 ▲민주노총 규정 및 규칙 중 일부 개정 건 ▲각종 특별위원회 폐지 및 직선제특별위원회 설치 건 ▲사무부총장, 실장·부설기관장 인준 건 ▲201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 ▲상설연대체 확대·재편 건 등 안건이 처리. 또한 2010년 특별사업으로 계획된 중앙노동센터(가칭) 구축도 힘있게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심판하고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고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자서민 기본생활 쟁취 △지자체·교육감 선거 승리 △조직혁신 강화 △진보진영 단결과 통합실현 및 반MB연대 강화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주요과제들을 확정했음.

2) 민주노총 임원 현장 순회 및 지방선거 대응

- 민주노총이 17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음달 28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상반기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고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지만 조직별 의견 차가 커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 민주노총은 6월 선거 대응방안의 핵심 기조로 '이명박·한나라당 심판'을 제시. 이에 따라 단일후보에 대한 표현도 '진보정당 통합후보'가 아닌 '반MB연대 단일후보'라는 문구를 사용했음. 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5+4 협의체'를 구성해 단일후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해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포함한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임
- 일부 중앙위원들은 반MB 투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정당과 시민단체 모임인 '5+4 협의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고 24일 중집을 열어 재결정 할 예정.

2. 금속노조

1) 한진중공업 울산공장, 전 직원 전환배치 추진

- 한진중공업 울산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17일 다음달 말까지 울산 조선소 임직원 200여명을 부산 영도조선소로 전환배치하겠다고 밝혔음. 사측은 한진중공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 10여곳에 다음달 울산 조선소의 모든 작업이 중단될 예정이라는 공문을 통보했음.
- 내용으로만 보면 울산조선소를 폐쇄하겠다는 뜻임. 사측은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선박물량이 급감해 울산조선소를 가동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상태.

2)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위원회의 정규/비정규 연대투쟁

- 전주공장에서는 버스생산라인 속도 조절에 따른 인원 협상에서 사측이 정규직은 전환배치로 일자리를 보장하지만, 비정규직 18명은 계약해지 하겠다고 방침을 통보하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충고용 보장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버스부 정규직들의 2월23일 공장장실 항의농성, 24일 비지회 출근투쟁 결합, 연일 100여명의 정규직들이 투쟁을 함께하고 있고 3월 5일에는 버스부만이 아니라 트럭부, 엔진부 등 전주공장 전체 노동자들이 잔업을 거부하며 비정규직 투쟁에 과감한 연대행동을 보여주었고 있음. 버스부는 6~7일 주말특근도 거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출근투쟁에는 연일 130~150명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고있음.

3) 금속노조 경주지역본부의 지역전면연대파업

- 경비 및 통근버스에 대한 외주화로 인해 시작된 경주지역 발레오 노동조합의 투쟁은 2월 사측의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으로 전환점을 맞이함. 발레오의 사장 강기본은 이미 인지컨트롤스에서 사장으로 재직 시 노조에 대한 탄압을 극렬하게 했던 장본인임. 그가 발레오에서 한 일은 경영이 아닌 자본 철수에 대한 일들이었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민주노조 말살을 노골적으로 진행했음.
- 이에 맞서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3월4일 확산파업과 공장진입투쟁을 거쳐, 9일 지역 22곳 사업장 3200명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음.
-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경주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발레오 지회장 체포, 관리자를 동원한 주말생산라인 가동 등 파업에 대한 총력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음.

4) 캐리어 에어컨 지회, 광주노동청 앞 농성투쟁

- 캐리어에어컨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 280명을 정리하고 통보 한 달 뒤인 지난 1월 14일 경영이 호전되었다며 임시직 채용 및 도급화 계획을 발표. 그러나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러한 회사의 부당한 계획을 조사하고도 제재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지회와 원직복직 투쟁중인 40명의 조합원이 회사의 정리해고 철회 및 노동청의 즉각 제재를 촉구하며 천막을 치고 투쟁을 진행중임.

3. 공공부문

1) 공무원 노조 출범식 강행

- 20일로 예정됐던 전국공무원노조의 출범식 겸 간부 결의대회가 KBS 88체육관측의 계약취소로 무산됐다. 노조는 장외집회를 고려하고 있음. 노조는 17일 투쟁본부 회의를 열고 “최대한 안정적인 행사공간을 확보하되 안 되면 국민들과 만남의 공간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장소에서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노동·민주 세력과 연대해 대회를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4. 기타

1) 새희망노동연대 출범

- 3월4일 충주시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에서 전국50여개 노조, 조합원 12만명으로 추산되는 ‘새희망 노동연대’(이하 새연대)가 출범. 새연대 출범에는 현대중공업노조,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 서울지하철노조, KT노조 등이 참여.
- 오종쇄 현대중공업노조,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출범식에 참석한 일부 노조집행부는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의 총회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은 노동운동 청렴성 확보, 노동자를 섬기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노동운동을 지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투쟁과 교섭보다 정책과 공익을 지향해 국민의 신뢰받는 노조로 거듭날 것을 결의. 5월1일 ‘노동절’에도 집회 대신 사회봉사활동을 한다고 함.

■ 여성

1. 낙태관련

- 낙태 단속·처벌로 인해 낙태 비용 2~3배 증가, 300~500만원을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함. 감시가 심한 수도권을 피해 지방으로 원정낙태 가는 곳도 발생.
- 낙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정부와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의 빠른 실천력에 비해 여성운동진영의 대응은 더디고, 고립분산적임.
- 정부는 불법 낙태 해결을 위한 계획 발표, 하지만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 여성계의 동시 반발이 있음. 의료계는 불법 낙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이냐 반문하며 더 강한 단속과 사회적 인식 전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여성계는 불법 낙태 단속과 처벌이 아닌 여성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 또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한편, 법적 허용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최근 논의의 화두가 되고 있음.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낳으라고 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법적 허용 범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발표(3/3)
 - 생명존중 사회적 분위기 조성, 피임실천을 높이기
 - 위기임신 상담기반, 임신 청소년 건강관리
 - 비혼 한부모 자립에 도움 ;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24세 이하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의료비 월 2만 4천원 지원, 월 20만원 한도의 가구별 발달자산형성 지원
 - 불법 인공임신중절기관 신고체계 마련 ; 산부인과 의료계와 협력
 - 인공임신중절 예방 상담제를 도입, 실태조사

[국회토론회] 낙태, 합법적 허용범위는?

- 3/17 국회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전현희(민주당)의원 주최 토론회, 허용범위에 대한 토론 오감.
- 박형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변인 : 사회경제적 사유와 태아기형의 사유등이 포함되지 않은 현행 모자보건법은 개정이 시급
- 장석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부회장 :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미혼모가 급증하고, 음성화되는 등 부작용이 심할 것. 모자보건법과 관련해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본인의 동의에만 의해서도 시행할 수 있으며 임신 12주~24주 임신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산부인과 의사의 상담에 의해서만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
-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 모자보건법 개정은 낙태를 합법화할 수 있는 느슨함을 보이게 될 것,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 한국도 낙태는 해선 안된다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
-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 만약 임신한 십대 여성의 학업과 진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원할 경우, 안전하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후유증이 없도록 '선택적 낙태 허용'이 필요함
- 정춘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장 : 조사결과 기혼 여성의 30%가 배우자의 강제에 의해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다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
- 이원희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장 :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임신중절 법제위원회(가칭)'를 이번 달에 구성할 계획이라며 낙태 허용 질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낙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함.

[일다] '낙태죄 폐지할 시기에 한국에서는 고발이라니..'

- 2009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로 일본에서 '낙태죄'폐지 운동 진행 중. 일본에는 낙태죄를 금지하는 형법과 함께 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우생보호법(1948년 제정)이 공존해 있음. 정치인들이 '경제적 사유'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따라 여성운동과 장애인 운동의 연대로 1996년 우생보호법 폐지, 현재의 모체보호법 제정됨. 그러나 여전히 낙태죄에 대한 형법 조항은 존재하며 모체보호법과 충돌되어 왔고, 유엔으로부터 권고 받음. 이에 '낙태죄'폐지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프로라이프 의사회]

-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 개최
 - 3월 24일 오전 10:30, 한국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를 개최
 - 의사들, 각 종교계, 일반인이 함께 하는 행사
 - 낙태 근절 선언식과 5대 우선 정책 과제 촉구, 낙태 사례 및 낙태 후 후유증에 대한 발표
- 여성계의 논란과 반박이 잇따르며 '여성의 결정권'에 대해 일부분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 이들은 최종적으로 고통과 책임을 감내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최종 선택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함. 하지만 최종결정권을 여성에게 부여하면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낙태는 단속,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임.